

추미애 “윤석열, 선 넘었다”

국회 법무부 국감

“장관은 총장 상급자 수사 지휘권 발동은 적법 尹 국감발언 중립성 훼손 옵티머스 무혐의 수사 감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공격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추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서 라인-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에 의원의 질문에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추 장관은 라인 사건 수사정보가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이 직접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며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국감 답변 태도와 관련해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관으로서 민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국감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면서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난 것과 관련해선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직접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주 적법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면서 감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달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했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인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

증됐다”며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넘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반문했다.

윤 총장 가족 의혹에는 “사실상 보고받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주장을 보도록 했는데, 공적으로 처리해야 남들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 대상이고, 수사 지휘는 당연하고 적법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부적절”

이현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공수처법 반대 인터뷰 여 지도부 “시간 끌기 단호 대응…공수처 부정 인사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절차와 관련해 야당 측 처장후보 추천위원 내정자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 2명을 가리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현 변호사를 지칭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면서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연 원내대표도 “추천위원을 내정한 야당의 의도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지만, 미리 판단하지는 않겠다”면서 “야당이 또 다시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꾀수 정략으로 나온다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현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인터뷰했던데, 국민의힘이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의도임이 증명됐다”면서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의 추천

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현행 공수처법을 고치면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궂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 불가능해진다”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진행해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의결 정족수 조항 개정 여부와 관련해 “미리 못 봐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원만한 게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기한을 정하는 등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유능백년 민주당’

더혁신위원 구성 완료

더불어민주당 ‘2020 더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26일 위원 구성을 마쳤다.

혁신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혁신위는 운영 기조를 ‘스마트하고 유능 백년 민주당’을 기치로 삼았다”고 밝혔다.

운영 기조로 ▲선거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유능 정당 ▲혁신 에너지가 결집하고 인재가 모이는 집단지성의 중심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선도하는 포용 정당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김민석·권칠승·이우우·이탄희·오기형·홍정민 의원, 최지은 국제대변인,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7일 준비회의를 겸한 상견례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한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윤영덕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 정책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이 26일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사학개혁을 위한 제·개정안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 열 가지를 제안했다. 자료집을 통해 이사회 및 친인척 중심 운영 체제 극복, 비리 당사자 대학복귀 금지, 개방이사 제도개선, 총장선출 제도개선,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강화,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대학운영 정보 공개 확대, 교육부 감사 강화, 사학비리



제보자 피해방지, 폐교시 잔여재산 환원 재고 등을 과제로 꼽았다.

윤 의원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이 미완의 개혁으로 그치면서 사립대학 부정·비리는 계속 이어졌고, 보수정권 하에 이루어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의 구제단 복구 결정 등은 사학개혁을 퇴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해수욕장 275곳 중 53곳 편의시설 없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275개의 해수욕장 중 15개 항목 편의시설이 단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53개에 달했다. 모두 갖춘곳은 대전해수욕장이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실(82%) ▲소변기(77%) ▲세면대(75%) 순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했다.

구체적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수욕장관리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등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설치된 시설도 효용성이 떨어져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별로는 임산부휴게시설과 매표소 등에 대한 미설치율이 99%로 가장 높았고 ▲유도 및 안내설비(96%) ▲계단 또는 승강기와 경보 및 파란설비(94%) ▲점자블록(91%) ▲복도(84%) ▲사위

김승남 ‘해양오염 분석업체 검사결과 조작 의혹’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바다의 환경오염을 측정·분석하는 정부 인증 기관들이 검사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의 해양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해양퇴적물 중 PCB, PAHs가 검출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고 수은의 경우, 기준을 초과

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고 보고됐다. 김 의원은 “업체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업체들에 대한 인증 취소와 수사 등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쿠광, 특수건강진단 불이행·산재 은폐’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국정감사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최근 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노동자 사망 관련, 쿠광이 지난 4월 고인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은폐는 물론 지금까지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발생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강은미 의원은 “인사 후 몸무게가 15kg이나 줄었고, 평소 마스크를 종일 차고 일해 호흡기가 몹시 불편하며, 하루 5만보 이상을 걸었다고 했다”면서 종대제에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등 광범위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쿠광에 대해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강 의원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쿠광폴리머서비스 철곡물류센터에서 일고에서 출고까지 모든 일을 지원하는 일을 해 왔고, 지난 4월 4일 근육피로와 통증을 호소하다 지난 4월 8일부터 5월 2일까지 요양을 가졌다. 하지만 쿠광은 고인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분양가	매각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분양가	매각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흥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 1개	2,530	1,780	리솜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실버(24)방1	2,850	1,6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스위트형 방 2개	3,600		2,680	덕산 스피러스	골드(28)방2	3,21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 2개)	2,480		1,680	안면도 아일랜드	로얄(34)방3	4,890
	디럭스형 무기명 (방 2개)		3,110	1,880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